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2/ 9 통권 1496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사업도 밀천이 든든해야 성공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2020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핵심쟁점과 계산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건물내 기존 급수, 배수관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과 개인의 일반부동산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 부 비교 >

구분	법인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	일반개인 (양도소득)	사업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
근거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69조
과세개념	과세특례	예정신고	예정신고
대상	비사업용부동산(주택, 농 지, 임야, 목장용지 등)	모든 부동산 등(토지, 건물, 주택 등)해당 • 비사업용 10% 추가	부동산매매업(개인사업 자)의 모든 부동산 등 • 비사업용은 10% 추가
세율	일반법인세(10%, 20%)+ 차익×10% 추가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납부	1년간 여러 건 통합결산신 고 등 (차익⊕, 차손⊖ 등 통합)	부동산매매차익, 차손 을 매매월말부터 2개 월 내 예정신고납부 (건별이며 연속 합산)	매매차익, 차손을 매매월 말부터 2달 내 예정신고납 부함(각 건별)
예정신고 여부와 이유	예정신고 없음 (법인이므로 1년 결산 확정 신고만 이행) ① 법인, 계속기업의 원칙, ② 이익과 손실의 통합손 익합산 등 ③ 소득원천징수 안됨	2달내 예정신고 ① 계속성 없음 ② 대부분 차익으로 추정 ③ 배당 등 원천징수와 일맥상통	2달내 예정신고 ① 계속성 부족 ② 손실가능성 있음 ③ 배당 등 원천징수와 일 맥상통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12월 9일 (수) · 주간제 50호 · 통권 제 1496호 ·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
구독료 월 30000원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6 호 / 주간 50호

2020. 12. 9.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과 개인의 일반부동산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2020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핵심쟁점과 계산사례	2
C E O 에 세 이	사업도 밀천이 든든해야 성공한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한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공급하여야 함 - 결손금발생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가능함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7
매 일 절 세 제 무 요 점	-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9 10
직 장 인 Survival	영업은 기업의 '꽃'이다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령법민-3409, 2020.04.20) -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법령소득-182, 2020.05.2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신택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2022년부터 6개월 유예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건물내 기존 급수, 배수관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14
세 무 정 보	-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15 36
회 계 정 보	- 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3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7

2020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핵심쟁점과 계산사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과세대상 :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주택만 해당(임대주택은 합산제외)
2. 과세금액 : 세대별 주택가격(= 아파트 등 국토부 공동주택고시가격+단독주택토지 국토부 개별공시가+건물가액 국세청 고시가격)
3. 계산방법 : {주택가격합계 - 기본공제액(기초생활재산금액 : 납세자별 6억원, 또는 1세대별 9억원)} × 공정시장가격비율(올해는 90%) × 세율(0.5%~2.7%) - 종부세의 과세표준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 안분금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20~50%) · 연령별 공제(10~30%) 공제합계 한도 70%임.
4. 기본공제액 적용금액(인별적용) : ① 1세대 1인 명의 1주택 : 9억원, ② 1세대 2명의 공유1주택 : 6억 × 2인 = 12억원, ③ 1세대 2주택 1명의 단독소유 : 6억원, ④ 1세대 2주택(부부 각자 명의구분소유) : 각 6억 × 2인 = 12억원 공제됨.
5. 계산사례 : ① 1주택 고시가액 12억 아파트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12억 - 9억 = 3억 × 90% = 2.7억 × 0.5% = 1,350,000원 - 재산세 상당액 580,000 = 770,000 × 60%(10년보유 40% 공제함) = 462,000원 × 1.2(농특세 20%) = 554,400
 ② 1주택 : 고시가격 15억 아파트 부부 공동소유 : 2인으로 나눔 : 1인당 7.5억 - 6억 = 1.5억 × 90% = 1.35억원 × 0.5% = 675,000원 - 재산세 196,000 = 479,000 × 60%(10년 보유) = 287,400 × 2인 = 574,800 × 1.2 = 689,760원
 ③ 2주택 이상 : 고시가액 9억 아파트(여 배우자) + 7억 단독주택(남 배우자) : 2주택이므로 세액공제 안됨
 아파트 9억 - 6억 = 3억 × 90% = 2.7억 × 0.5% = 1,350,000 - 재산세 648,000 = 842,400원
 단독 7억 - 6억 = 1억 × 90% = 9천만원 × 0.5% = 450,000 - 재산세 140,000 = 310,060원 × 1.2 = 372,000

사업도 밀천이 든든해야 성공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운수 (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비근한 예이지만 노름에서도 밀천이 든든한 사람이 끝내 판을 휩쓴다고 한다. 적어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어떤가. 대체로 밀천이, 자기자본이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한다. 게다가 적정자본보다 과분한 규모의 사업을 밀어 부친다. 그리고 이내 배보다 배꼽이 큰, 즉 자기자본보다 몇 배 되는 빚을 내어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니 온갖 무리수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사업 수완처럼 미화되는 풍토였다. 그러다가 공장 등 담보물인 부동산의 값이 제때 상승해 주지 않아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할 때 조금만 빠듯하면 휘청거리며 쓰러지기 일쑤였다.

작은 반을 어음 한 두개가 부도나면 영락없는 연쇄 부도였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열올리며 침을 튀긴들 어찌하겠는가. 한국의 기업은 그 만큼 유동성 면에서 지구력이 허약한 실정이었다. 대마불사, 성장의 신화인 대기업들이 무참하게 연이어 쓰러지는 오늘의 현실이다.

필자는 풍부한 밀천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했다. 풍부한 자기 자금이 없이는 소신 경영, 즉 그때그때 신속하고도 최상의 의사결정(Speedy & Best Decision-Making)을 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경험에서 나온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이태리 본사의 회장과 월급쟁이 사장인 필자는 의류사업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시쳇말로 빅딜(Big Deal)을 했다. 당연히 의류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물론, 성공의 가능성과 전략 등을 브리핑했다. 초기 자본 6억으로 출범키로 했다.

당시 한국 실정으로는 적은 자기자본은 아닐지 모른다. 많은 경우 그 정도 금액으로 아니 더 적은 액수로도, 사업의 출범을 서두르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달랐다. 턱없이 부족했다. 빚을 내어 할 수도 있다. 빚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든다. 그래서 대세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쉽다. 당시 필

자는 월라의 신발 수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필자는 그에 따른 수출 수수료를 받았다. 월라 신발 사업에 따른 수출 성공 수수료(Success Fee)를 담보로 이태리 본사와 빅딜(?)을 한 것이다. 그 해 적어도 2억5천만 달러어치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 3%의 성공 수수료는 적어도 750만 달러가 된다. 어차피 주고받을 수수료이므로 선불을 요청했다. 이태리 본사의 회장도 쾌히 승락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호사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그도 잘 알기 때문이리라. 다 날려도 좋은 자금 750만 달러! 이것이 힘이 되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몇 년간 은행에 80억원 이상 현금을 예치해 둔 덕에 이자를 포함하여 연 16억원에서 26억원까지 순이익이 있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 신뢰는 풍족한 밑천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150만 달러라는 거액의 충분한 필자에 대한 연봉이란 보상이 필자로 하여금 한 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했다. 어쩌면 이러한 월라코리아의 내수사업은 성공을 처음부터 보장받은 것과 같았는지 모른다.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Q

(사실관계)

1. 대학치과병원 주관으로 외부 치과의사대상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2.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영상촬영, 출결관리, 수료관리, 대금결제 등을 위해 본원은 외부 교육업체에 일련의 과정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교수 강의 및 커리큘럼 등 지적재산권을 제공합니다.)
4. 외부 위탁업체가 온라인 교육 총대가를 먼저 수취하고, 계약에 의거하여 본원은 그 총대가를 정산하여 일부를 배분받고 나머지 일부는 위탁업체에 귀속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본원이 제공하는 강의 및 커리큘럼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추가적으로 세무/회계적 입장에서 추가적인 제약사항은 있는지 여부

A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보수교육이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된다면 면세라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한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공급하여야 함

- Q** A → (납품) → B → (납품) → C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Scrap 발생
 2. A 업체 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품을 B 업체 에서 반값으로 구매하기로 제안
 3. A 업체 해당 부품을 판매할 때 시스템 상 단가를 절반으로 입력 불가 하여 원 단가로 B 업체에서 구매하고 C 업체가 절반에 대한 비용을 B 업체에게 지급
- 문의
1. 상기와 같은 거래가 성립이 가능한지?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건 인지?
- A** A업체에서 B업체로 부품을 반값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판매하기로 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면 되며, A업체의 시스템문제로 가격을 반값으로 입력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 특정 거래처 재화를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차액에 대해 접대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발생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가능함

- Q** 당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 사업년도 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시기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상담실 백종훈 차장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관련 세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등의 사실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사실과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보다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쉽거나 틀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연도 중에 결혼하고 12월31일 이전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도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가 되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4.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도 적용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6.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7. 처남 및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처남이나 처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의 공제방법

대학에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수시모집 합격에 따라 올해 납부를 한 금액이라도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9. 초등학교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등학교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1.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12. 20세가 넘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3.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며,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	내용
소득세법	개인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구간 세율 인상(42%→45%)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소득 2022년부터 과세(2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주식 등 양도차익에 2023년부터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세제혜택 받으면 기본공제 9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뉴딜인프라펀드 투자시 배당소득 분리과세(9%)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2021년 상반기까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



개인유사법인 배당소득 간주제도

개요	법인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개인유사법인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사업특성을 감안 제외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 후 소득기준에 따라 과세
배당간주금액	(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중복과세 방지	배당간주금액 과세 후 실제 배당한 금액에 대해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1단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2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 정보 제공 + 10~12월 사용 예상액 입력 → 소득공제 예상액
3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예상액 반영, 그 외 항목 올해 예상액 수정 → 예상세액 확인
4단계	항목별 절세팁, 3개년 추세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 확인 • 세액 증감 원인 분석을 위한 3년간 신고내용 확인 가능



가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상속세+소득세율 자료)

구분	최고세율		
	상속세(직계비속)	소득세	상속세+소득세
벨기에	30	50	80
프랑스	45	45	90
일본	55	45	100
한국	50 *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	42	92 (102)
독일	30	45	75
영국	40	45	85
미국	40	37	77
네덜란드	20	52	72



영업은 기업의 '꽃'이다

영업활동 없이는 매출도 없습니다. 창조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마케팅 전략개발, 고객상담, 협상능력 등의 영업 스킬을 습득해야 합니다.

영업을 잘하는 기업과 영업을 못하는 기업의 차이점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고객에게 어떻게 나타내는가의 방법차이입니다. 기업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해 일을 수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먼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창조기업이 갖추어야 할 영업 역량

영업을 잘하는 기업은 계획,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고객을 만나기전에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일이 성사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 준비활동을 귀찮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업무에 열중합니다. 즉, 뛰어난 영업사원은 '지식', '스킬',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업력과 마케팅역량

기업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업에 강해야 합니다.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영업력을 핵심으로 한 마케팅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력'과 '마케팅력'이야말로 창조기업의 핵심역량 중 하나입니다.

창조기업은 꾸준히 자신의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영업활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규칙, 근성, 임기응변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건물내 기존 급수, 배수관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급수·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이므로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내 기존 급수·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세제과-1123, 2020.05.19

■ 질 의

건축물의 대수선이 아닌 단순 리모델링 공사 시 급수·배수시설 및 열공급 시설물과 연결하여 쓰이는 각종 배관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에 부합된 배관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교체 배관의 종류 : 오배수배관, 냉난방배관, 급수·급탕배관, 우배수관 등

■ 회 신

○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개수"를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송수관(연결 시설 포함),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수·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세심판원 2019지2003, 2019.6.26. 결정 참조),

-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내 기존 급수·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지방세정팀-837, 2006.2.28. 참조)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질의대상 배관이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배관의 교체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령법인-3409, 2020.04.20

■ 질 의

○ A법인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같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법인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 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법령소득-182, 2020.05.20

■ 질 의

-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전환사채의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를 환매수하는 경우 투자자의 처분대금과 사채원금의 차액의 소득구분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법인-3620, 2020.05.26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 (질의2)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사업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연구개발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결한 계약내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2022년부터 6개월 유예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목에 걸쳐 있는 신탁 관련 세금제도가 명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신탁이 개인의 복지형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제도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당사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되어 있어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개편안을 6개월 유예한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3개월 유예

가상자산 과세시기가 당초 정부계획보다 3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을 의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으나, 소득세 과세대상을 법에 열거하도록 하는 국내에서는 그간 별도의 법개정이 없어 가상자산에 대해 무과세 상태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정상화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를 추진해왔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 계산하되 연간 손익을 전체 통산하여 계산한다.

연간 250만 원 이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회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소득세율 최고 45%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기획재정부, 2020. 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부가가치세법 >

-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개별소비세법 >

-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 현행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 국세징수법 >

-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 관세법 >

-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조세특례제한법 >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20.12.31. → '21.6.30.)
-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 연안화물선용 경우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
(중견·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대규모 조합법정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
(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별첨 - 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1. 국세기본법

①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 47의4⑨)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미납세액의 300%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 납부) 100% <input type="checkbox"/>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input type="checkbox"/> (6개월 초과 납부) 300%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국기법 § 47의2③, § 47의3⑥, § 47의4③)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삭 제> </div>

<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 45의2③·④)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 85의 6, § 90)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예)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좌 동)
<input type="checkbox"/>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input type="checkbox"/>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삭 제〉

<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 2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변경 ◦ 1년 → 5년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 작성주기: 1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 작성 가능 ◦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현행 유지 ◦ 1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삭 제> </div>

<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2. 소득세법

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 21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시행시기)'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 (좌 동) </div> ◦ '21.10.1. →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②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 52④,⑤, 조특법 § 9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p> <p>*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p> <p>○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p> <p>*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 용</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p> <p>○ (좌 동)</p> <p>-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p> <p>*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p>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 산세</p> <p>○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p> <p>○ (가산세) 지급금액 × 0.5%</p> <p>*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p>	<p>□ 가산세율 50% 인하</p> <p>○ (좌 동)</p> <p>○ (가산세) 지급금액 × 0.25%</p> <p>* (좌 동)</p>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 75의4, § 112의4, 소득법 § 81의7, § 160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법 § 75의4, 소득법 § 81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 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 <추 가>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 112의2, 소득법 § 16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제출할 의무 <단서 추가>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단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단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의무 면제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율 50%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중부법 § 10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기본공제 : 9억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부가법 § 3, § 3의2, § 8, § 10⑧, § 52의2, § 5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 (시행시기) '21.7.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시행시기) '21.7.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고·납부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좌 동) - '21.7.1. → '22.1.1. ◦ (좌 동) - '21.7.1. → '22.1.1. ◦ (좌 동) - '21.7.1. → '22.1.1. ◦ (좌 동)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 35)

정 부 안		수 정 안
<div>□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div> <div>○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div>		〈현행 유지〉
(현 행)	(개정안)	
<div>- 다음의 경우 발급</div> <div>■ 수입자의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div>	<div>-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div> <div>■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 신고한 경우</div> <div>■ 특수관계 거래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div>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개별소비세법

①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 1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좌 동〉
<input type="checkbox"/>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수정이유〉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장, 7절, 57조 □ 장(章) 및 절(節)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장(章), 조(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장, 26조 □ 목적에 따라 장(章)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 ○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장: 신고와 납부 ○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제5장: 면세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제7장: 벌칙

<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②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 7)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면허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률 → 「조세법 처벌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 31의2제1호, 「청소년 보호법」 § 56, § 58 3호·6호, § 59 1호·2호·6호·7호·7호의2·7호의3

<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 5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추가 <input type="checkbox"/> (신고* 대상) 국외소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매월말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 신고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21. 10.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3개월 유예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1. 10. 1. → '22. 1. 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9. 국세징수법

①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 2 등)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input type="checkbox"/> 체납처분	<input type="checkbox"/>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 강제징수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 1. 1. 이후 적용

10. 관세사법

①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 1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명의대여 금지 관련 처벌대상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처벌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 알선했던 자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②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 31)

정 부 안			수 정 안		
□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 통관업 오인 광고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위반행위	현행	개정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세사 등 유사명칭 사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사 등 유사명칭 사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통관업 오인 광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벌금	통관업 오인 광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11. 관세법

① 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 § 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용어의 정의 ○ 수입 ~ 운영인 〈추 가〉	□ 용어정의 추가 ○ (좌 동) ○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②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 176조의2④)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추 가〉	□ 감경근거 신설 ○ (좌 동)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시 감경 가능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③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 § 237)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관보류 사유 ◦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input type="checkbox"/> 통관보류 대상 확대 ◦ (좌 동)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④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 277④)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좌 동)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⑤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 § 42⑧, § 42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 가산세 ◦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 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부과 범위 조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0 10px;">(좌 동)</div> <div style="margin-left: 20px;"><삭 제></div> </div>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 § 37의4, § 27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 ◦ 거짓제출 ◦ 부실제출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삭 제〉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input type="checkbox"/> 추가 과태료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삭 제〉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등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조세특례제한법

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 26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①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②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③공 모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특정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집합투자기구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율: 9% ◦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 (적용기한) '22.12.31.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요건 조정(조특법 § 8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 ◦ (연령) 가입 당시 20세 이상 ◦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07~'22년분 : 비과세 ② '23년분 : 분리과세(세율: 5%) ③ '24년 이후분 : 분리과세(세율: 9%) 	<input type="checkbox"/> 연령요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연령) 20세 → 19세 ◦ (좌 동)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③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6의3)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소상공인인 임대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간) '20.1.1. ~ '20.6.3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 '21.6.30.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2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적용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좌 동)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 63, § 6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p>□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 이전 시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 (적용기한) '22.12.31. 	<p>□ 감면한도 신설 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삭 제) ○ (좌 동)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p>□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p> <p>○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p> <p>-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p> <p>○ (적용기한) '22.12.31.</p>	<p>□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p> <p>○ (좌 동)</p> <p>○ (삭 제)</p>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9의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요건</p> <p>*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p> <p>○ (폐업일) '19. 12. 31.</p> <p>○ (재기기간) '20. 1. 1. ~'22. 12. 31.</p> <p>○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 7. 25.</p> <p>○ (신청기간) '20. 1. 1. ~'23. 12. 31.</p>	<p>□ 적용기한 1년 연장</p> <p>○ (폐업일) '20. 12. 31.</p> <p>○ (재기기간) '20. 1. 1. ~'23. 12. 31.</p> <p>○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p> <p>- '19. 12. 31. 이전 폐업시: '19. 7. 25.</p> <p>- '20. 1. 1. ~12. 31. 중 폐업시: '20. 7. 25.</p> <p>○ (신청기간) '20. 1. 1. ~'24. 12. 31.</p>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⑧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의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 * '21.1월부터 연료유 항 함유량 기준 강화 <input type="checkbox"/> (내용) 경유 유류세 15% 감면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input type="checkbox"/> 유류세 감면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대상) 모든 연안화물 선박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⑨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절차)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input type="checkbox"/>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생산성 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6.30.	<input type="checkbox"/>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21.1.1. ~ '21.12.31

<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11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 72)

정 부 안	수 정 안
<p>□ 대규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p> <p>○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p> <p>-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적용 배제</p> <p>○ (적용세율)</p> <p>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p> <p>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p> <p>○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p> <p>*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p> <p>○ (적용기한) '22. 12. 31.</p>	<p>□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p> <p>○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삭제></p> <p>○ (좌 동)</p>

<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12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 104의22)

정 부 안	수 정 안
<p>□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 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 공제</p> <p>(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p> <p>*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p> <p>○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p> <p>○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p> <p>○ (적용기한) '21. 12. 31.</p>	<p>○ (좌 동)</p> <p><삭 제></p>

<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13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 104조의31)

정 부 안	수 정 안
<p>□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손실 발생시,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 (적용기한) '21. 12. 31일까지 투자하여 '23. 12. 31일까지 펀드를 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14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 104의33)

정 부 안	수 정 안
<p>□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5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 97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p>□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p> <p>*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p> <p>○ 요건</p> <p>① (전용면적) 85㎡ 이하</p> <p>② (임대기간) 8년 이상</p> <p>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p> <p>④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p> <p>○ 특례</p> <p>-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p> <p>-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p> <p>○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 '20. 12. 31까지 등록</p>	<p>□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p> <p>○ (좌 동)</p> <p>○ 매입임대주택 : '20. 12. 31까지 등록 건설임대주택 : '22. 12. 31까지 등록</p>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16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104의8⑤·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신 설></p>	<p>□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p> <p>*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p> <p>○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p> <p>○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국세청, 2020. 11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 1. 1.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11. 20.(금)부터 12. 10.(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2021. 1. 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 31.(목) 고시할 예정입니다.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 텔	상업용 건물
총계	24,132	1,565,932	10,658	205,570	8,575	630,987	4,899	729,375	631,145	98,230
수도권	16,704	1,276,145	6,173	144,593	6,615	518,731	3,916	612,821	527,764	85,057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7,428	289,787	4,485	60,977	1,960	112,256	983	116,554	103,381	13,173

* 복합용 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 20.(금)부터 12. 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 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12.31.)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20.(금)부터 12. 10.(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 10.(목)까지 운영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27일 (금)	11월 30일 (월)	12월 1일 (화)	12월 2일 (수)	12월 3일 (목)
미 달 러 (USD)	1105.80	1104.40	1104.90	1107.10	1103.20
일 본 엔 (JPY)	1060.77	1061.57	1058.74	1061.30	1056.14
영 국 파 운 드 (GBP)	1476.96	1471.72	1473.00	1486.61	1475.11
캐 나 다 달 러 (CAD)	849.37	850.59	849.96	855.76	854.28
홍 콩 달 러 (HKD)	142.67	142.49	142.54	142.82	142.33
위 안 화 (CNH)	168.56	168.02	168.03	168.44	168.34
유 로 화 (EUR)	1317.12	1321.58	1318.31	1336.38	1336.54
호 주 달 러 (AUD)	813.81	816.54	811.71	816.82	818.26
싱 가 폴 달 러 (SGD)	826.06	825.35	823.91	827.65	824.62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71.86	271.38	271.21	271.31	270.58

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 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 -

- 한국회계기준원, 2020. 12

I.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과 부록(결론도출근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동 공개초안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연결 재무제표 최초 작성 시 지배기업이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예: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비용 증가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기존 회계처리 유지 가능:
 - ① 원가법을 적용해 왔던 경우 원가법 유지 가능
 - ② 지분법을 적용해 왔던 경우 지분법 유지 가능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II.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연결 재무제표 최초 작성 시 지배기업이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예: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비용 증가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 KASB는 2020년 12월 9일까지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III.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의 주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기준	개정 주제
시행일 및 경과규정	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

IV. 개정 공개초안의 요약

시행일과 경과규정 추가

◆ 종속기업 범위 개정(문단 4.3,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 적용 유예

- (개정 사유)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종속회사의 정의를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참조한 '종속기업의 범위'를 개정 공표하고, '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하도록 결정하였으나(일반기준 연차개선 2018),
 - 최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연결 재무제표 최초 작성 시 지배기업(중소기업)이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예: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비용 증가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필요
- (개정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에 따른 개정내용 중 문단 4.3,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신설함



- 결론도출근거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신설한 이유를 기술함

V. 검토 내용

1.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8.09.21, 11.09, 11.14.): 적용 유예

(1) 개정 이유

① 관련 기준서 내용

- ('18년 개정 내용) '18년 외감법령 개정으로 종속회사의 정의를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등에서 종속회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참조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였음
- (적용일) 시행일('19.1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20년)부터 적용

- ('18년 개정 영향)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 즉 과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왔던 피취득기업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편입(전진적용)

- 해당 피취득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은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 단계적 취득법

* 지분법을 적용해 온 경우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음

〈 단계적 취득법 적용 결과 〉

※ 취득일*1('20년초)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피취득기업*2(지분법 미적용)에 대해, 동일자에 지배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1 '18년 개정 내용의 시행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 개시일

*2 과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왔던 피취득기업

①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20년초)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①과 ②의 차이를 영업권(①>②) 또는 염가매수차익(①<②)으로 인식

① 이전대가 :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20년초) 공정가치

② 취득일('20년초)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② 문제제기 사항

- 중소기업(지배기업)의 경우, '18년 개정내용(①에서 설명)에 따라 단계적 취득법을 적용하게 되어, '20년에 최초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소규모 종속기업의 주식과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함
-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공정가치 평가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코로나19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이 회계법인, 한공회와 함께 운영 중인 '코로나19' 회계이슈 대응 TF에서 제시된 의견

〈 단계적 취득법 적용대상 기업 : ❶과 ❷ 〉

❶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일반기준 제31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문단 31.6)

❷ 일반기준 제8장 예외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

→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문단 실8.1)

⇒ ❶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정가치 평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③ 검토내용

● 중소기업(자산총액 120억 미만 등)은 '18년 개정내용에 따라 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소규모 종속기업에 대해 단계적 취득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소규모 종속기업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공정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음

●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자문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외 소규모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의 제약이 커질 수 있음: 공정가치 평가 비용 증가,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신뢰성 하락으로 인해 공정가치 평가의 효익이 불확실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이 소규모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정가치 평가 시기를 연기할 필요

● (검토 결론) '18년 개정 내용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22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 기존 회계처리 유지 가능:

① 원가법을 적용해 왔던 경우 원가법 유지 가능

② 지분법을 적용해 왔던 경우 지분법 유지 가능

○ '22년부터 중소기업이 단계적 취득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18년 개정내용을 이미 적용한 기업들을 위하여 '18년 개정내용 적용의 유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④ 실무에 미치는 영향

- '18년 개정내용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게 되면, 동 개정내용의 적용대상 기업^{*1}은 해당 피취득기업^{*2}을 '22년부터 연결대상에 편입할 수 있음

*1 ① 해당 피취득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 오지 않았던 기업(중소기업 등)

② 해당 피취득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 왔던 기업

*2 과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왔던 피취득기업

- 지분법을 적용해 오지 않았던 중소기업 등은 해당 개정내용 적용을 유예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최초 작성에 따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가 2년 연기되므로 이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지분법을 적용해 왔던 기업의 경우,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으므로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시행일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18년 개정내용 적용의 유예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18년 개정내용을 이미 적용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없음

⑤ 기타 고려사항

- '18년 개정내용의 적용 유예와 관련하여 이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실무적 부담은 일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만 발생하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님

② 해외 소규모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코로나 19 상황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 공정가치 평가의 어려움은 정상적인 영업환경에서도 발생

- 다만, 공개초안 발표 후 외부검토의견 조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 유예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에 따른 개정내용 중 문단 4.3,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신설함
 - 결론도출근거에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신설한 이유를 기술함

(3) 개정안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XX.XX.)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XX.)

시행일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 2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결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개정(2018. 10. 31.)에 따라, 동 부칙을 참조한 문단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도 이와 동일하게 2019년 11월 1일에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상장 기업의 실무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동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유예하였다.

VI.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안)	일 자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원회(서면 의결안건)	2020. 11. 6.
	외부검토의견 요청 (4주)	2020. 11. 10. ~ 2020. 12. 9.
개정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20. 12. 18.
	금융위 보고	2021. 1월 중



붙임

관련 회계기준

1. 2018년 개정 내용 (문단 4.4, 4.8(1), 8.35, 32.3)

4.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 (2)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3)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4)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1)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가) 영업권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나)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었으나,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파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파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 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2.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

시행일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에서는 제13장과 제21장의 용어의 정의 및 문단 4.3, 4.4, 4.5의2, 4.8, 8.35, 8.5의2, 8.8, 14.2 21.4, 21.5의3, 22.2의2, 31.6, 32.3을 개정하였다. 이 중 문단 4.3의 개정내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문단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문단 4.3,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 3 이 개정내용 중 문단 4.3,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경과규정 문단 4의 방법에 따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 3의2 이 경과규정 문단 3의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1)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



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직전 회계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③ 직전 회계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 (6)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 (7)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8) 위 (2)~(7)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 (9)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 (10)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 (11) 당해 회계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4

과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왔던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으며,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제12장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를 수행한다.

결1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었으나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18년 10월 31일 폐지, 이하 '외감법령')에 따라 그 피투자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 왔을 수 있다.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 법령이 삭제되고 전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4.8(1) 및 제8장 '지분법' 문단 8.35(7)과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다만, 관련 외감법령 개정내용이 2018년 11월 1일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 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과규정 문단 3의2에서 종전 외감법령의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결2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3, 4.4, 4.8(1), 8.35, 32.3의 개정내용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피투자기업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최초로 편입되므로 투자기업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를 최초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지배력이 있었던 피투자기업에 대해 이미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라면, 지배력 취득 이후 사업결합과 유사한 회계효과가 반영되어 왔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6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8.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8.2)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 12.30 취득자는 때때로 취득일 직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자에 기업 B의 지분 40%를 추가로 매수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 하며, 때로는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예: 투자자산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한다.

영업권 또는 योग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 12.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1) 다음의 합계금액
 - (가)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12.27 참조)
 - (나)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문단 12.31 참조)
 -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12.30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2)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